과적단속정보 건네고 3억 '뒷돈'

공무원 7명 영장…화물차주 등 150여명 검거

경찰 "현금 없으면 인출기까지 따라가 받아"

화물차량의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국도관리사무소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화물차주 등 1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은 24일 과적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서모(34)씨 등 국도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원 7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도로관리원 12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안모(46)씨 등 화물차주 135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관리원 1명과 화물차주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도로관리원 20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화물차주들에게 이동식 과적단속반 위치를 알려주거나 과적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900여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 6명, 순천 1명, 경남 진주 5명, 전북 전주 3명, 전북 남원 2명, 충북 보은 2명 등 지역 국도사무소 소속으로, 한 사람당 많게는 5천만~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물차주나 운전자들에게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어디서 노느냐" 등의 '암호'로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대당 20만~5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관리원은 대형크레인 등이 사용되는 건설현장 주변에 단속 차량을 대놓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현금이 없는 화물차주에게는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돈을 받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사회적 기업 노동자 700여명 해고 위기

노동부, 매출기준 재심사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일해왔던 700여명이 무더기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 기업을 승인했던 노동부가 매출 기준에 의해 올해 말 재심사를 받도록 갑자기 시행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광주지역 40개 단체 1천18명 중 16개 단체 318명만이 재선정됐고, 나머지 빛고을바이크사업단 등 24개 단체 700명이 탈락해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윤기 협의회 대표는 "참여단체가 매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매출액의 증대 추이, 사업성과, 시설투자 여부 등을 검토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 지원하겠다는 노동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노동부 예산이 40%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에는 지난해 11월 40개 단체 1천18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선정됐으며, 이들 단체 등은 노동부로부터 1인당 80여 만원 씩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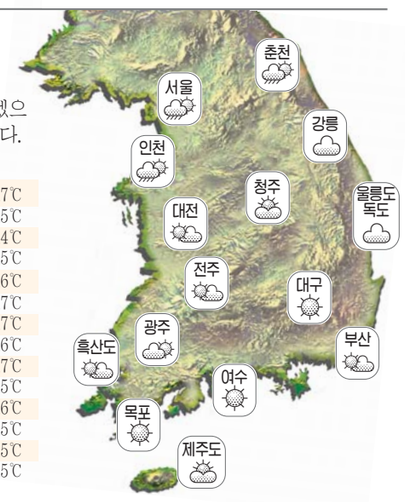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7분 해짐 17시 22분 달뜸 12시 59분 달짐 --시 --분

가을의 끝자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흐린 뒤 맑음	4/17℃
목 포	구름 조금	5/15℃
여 수	구름 조금	8/14℃
완 도	구름 조금	4/15℃
구 례	구름 조금	0/16℃
해 남	구름 조금	1/17℃
장 흥	구름 조금	1/17℃
고 흥	구름 조금	2/16℃
순 천	구름 조금	3/17℃
영 광	흐린 뒤 맑음	3/15℃
진 도	구름 조금	3/16℃
전 주	맑은 뒤 흐림	3/15℃
남 원	맑은 뒤 흐림	-2/15℃
흑산도	맑은 뒤 흐림	9/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07:12 19:55	00:42 12:38
여수	02:33 15:11	08:16 21: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12/1(화)
날 씨						
최저/최고	4/17	5/15	2/15	4/12	4/13	3/13

■ 끊임 없는 '과적 단속 비리' 왜?

화물차주 도로법 '덫'에 빠지고 공무원들 도덕불감증에 빠지고

국도관리사무소 소속 관리원들이 '과적단속 비리'에 대거 연루된 것은 현행 도로법의 제도적인 허점과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차량의 종류나 용도에 관계없이 길이와 중량 등 단속기준만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 화물차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건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은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크레인의 경우 자체 중량만 50~200t에 달하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도 자체 중량 16t에 화물을 실으면 25t을 초과해 과적단속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중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뒤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에 필요한 통과하중 계산서 작성에는 건당 1천만~5천만원의 토목구조기술사 용역비가 들어간다.

또 대형 중장비는 40t 미만으로 분해해 운송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해·조립 업체가 극소수인데다 시간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 화물차주들이 엄두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화물차주나 운전사들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챙겨주면서까지 차량 운행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상의 허점이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 등 상당수 중장비들은 자체 중량만으로도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비리 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주여성들이 만든 성탄 소품 광주시 남구는 24일 금호평생교육관에서 관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성탄소품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수강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소품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소태역~무등산 코스 이용하세요"

광주도시철도공사 개발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가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해 지하철 소태역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지하철 연계 등산로'를 개발, 홍보에 나섰다.

공사 측은 이 등산로를 이용하면 그동안 증심사지구에 집중됐던 등산객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주말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등산이 가능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제시한 등산로는 소태역 3번 출구→무등중→지원정수장→법현사→팔각정→장군봉→마집봉간 3.6㎞의 제1코스와 소태역 4번 출구→대명아파트→삼태경로당→바람봉→매봉→탑봉→마집봉으로 이어지는 4㎞의 제2코스다. 또 하산코스는 마집봉→소태제→신진자동차학원→소태역 4번 출구간 3.5㎞다.

공사는 지하철 등산로 일대에 등산코스 안내 리본 1천여 개를 부착하고, 로프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대자협 "민주적 정이사 선임하라"

내일 사분위 전체회의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부정·비리로 학교에서 퇴출당한 인사들을 배제한 민주적 정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평의회와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로 구성된 대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대는 부정비리 집단 때문에 광주·전남 시도민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역사가 왜곡, 사유화되고 교권 유린이 자행됐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자협은 또 "학교 정상화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비리집단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정이사로 선임된다면, 학교의 앞날은 분규와 학사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섭씨와 정애리시씨 등 일부 종전 이사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정이사 선임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뒤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26일 사분위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도 없다"는 입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司試 면접 22명 무더기 탈락

전남대 26명 최종 합격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22명이 무더기 탈락, 불합격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대에선 26명, 순천대는 1명이 최종 합격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51회 사법시험에서 2차 합격자 1천19명 중 997명이 최종 합격하고 22명은 면접에서 떨어졌다.

면접 시험이 강화된 2006년 이후에도 7~11명이 탈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불합격자 수는 평년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